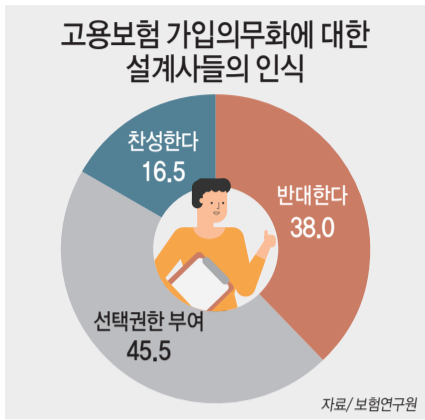


보험설계사, 사업자나 근로자나... 고용보험 적용 논란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반대의견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자 분류
적용시 매년 고용보험료 1000억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에 대해서만 고용
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보험설계사
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논란에 다시 불
이 붙었다. 최종 입법까지는 시간이 남
았지만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정부 및
여당과 야당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보험설계사 중에서도 고소득 설계
사와 저소득 설계사 간 이견이 있어 최
종 적용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
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개정안에 예술
인 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
스 등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방문 판매
원, 대리운전자, 목욕관리사 등 특수고
용직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
장했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문
제를 이유로 예술인만 고용보험 확대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수고
용직 대상에서 보험설계사는 제외됐다.

◆ 보험설계사, 근로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를 포함해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
디, 택배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을 가
리킨다. 예술인은 악단이나 무용단 등과
계약을 맺고 예술활동을 하는 음악가,
무용가, 화가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가입 대
상이 아니었다. 다만 노동계의 오랜 요구
에 따라 2008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
사, 골프장 캐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
고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
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
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
초를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
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들
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특히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였
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GA)과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특수
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보험설계사는 보험 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소득세
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 개인
사업자로 볼 것이냐는 해석이 다르다.

지난해 말 방송연기자, 택배기사, 재

택집배원, 학습지 교사에 이어 대리
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가 맞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나 행정 해석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으로 꼽
히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견은 팽팽
히 맞서고 있다.

◆ 보험설계사 대부분이 고용보험 반 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은 보험업계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우선 보험설계사를 '고용'해야 하
는 보험사는 막대한 고용보험료가 부
담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들에
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매년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고소득설계사는 소득 공개를 꺼리는
데다 고율의 소득세를 내야 해 반대 입장
을 보이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
세 3.3%만 납부하면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로자'가 되면 고소득설계사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인 40%까지 소득세
를 납부할 수도 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의 지난 201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 8개사 전
속설계사 800명은 고용형태로 근로자
(19.4%)보다 개인사업자(78.4%)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저소득설계사는 안정적인 신
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계약 해지 시 실
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
다. 다만 고용보험 의무화로 저능설
계사들에 대한 계약 해지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길어지는 항공사 비상경영체제

고용지원금 끝난 6개월 후 최악 구조조정 칼바람 부나

이태원 사태에 업황 정상화 미지수
운항 막히며 수익 못내는 적자구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항공
업계에 대거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
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코
로나19에 따른 직격탄을 맞으며 유·무
급 휴직 등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선은 물론 일부 국내선까지
잠정 중단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
이 막혔고, 외려 고정비용만 나가며 적
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인
건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이른바 '이태원 클럽' 사
태로 인해 국내 확진자 수가 다시 늘
면서, 업황이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항공업계 '큰형님'으로 꼽히는 대한
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
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
난달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간
휴업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체
인원의 70%를 넘는 규모이며, 부사장
급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 등 경영상태가 정
상화 될 때까지 임금 반납도 시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전직원이 매달 최소
15일 이상 쉬는 무급휴직을 진행 중이
며, 캐빈승무원과 국내 공항 지점 근무
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유급 휴직 신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서울 본
사 앞에서 진행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민
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합원의 정리
해고 중단 등 촉구 기자회견. /뉴스

정도 받고 있다.

대부분 항공사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
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
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
로부터 최장 6개월간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 현재 유
급 및 순환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
항공이 휴업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이유
기도 하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대부
분 LCC들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
해 약 70%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
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이하다.

(4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하겠습니다.

보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 수출입 피해기업 및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 기업당 지원한도 및 보증비율, 보증료율 우대

대출채권보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험 실시
- 코로나19 피해 및 피해우려 업종 해당 기업
- 인수비율 및 보험료 우대 적용

P-CBO

주력산업 및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
- 중견기업 350억원, 중소기업 200억원 한도로 지원
- 장기(3년) 저금리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 가능

| 대표전화 1588-6565 |